

문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것은 정치적 무관심뿐만 아니라 합의, 만장일치, 법치에 대한 맹신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의 부재는 정치적 성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공허함의 징후이다. 그런 공허함은 새로운 반민주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가져온다.

민주주의적 정치투쟁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자리는 다른 세력들, 즉 인종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이거나 종교적인 세력들이 차지하며, 그들의 대립 진영 역시 이런 식으로 규정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것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인 것’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성격을 인정함으로써만 그런 상황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진화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며, 현존 정치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쉬우므로 공고화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한순간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그 민주화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불충분할 때만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과잉 합의가 갈등의 역동성을 가로막을 때에도 위기에 처한다. 흔히 이런 합의는 밑에서 들끓는 갈등을 은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또한 하층 집단 전체가 주변화 됨으로써 그들을 사실상 정치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경우에도 위협 받는다.

오늘날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차원이 법치에만 제한 될 때, 정치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근본주의 운동에 합류하거나 반자유주의적이고 대중 영합적 민주주의로 기울 위험이 있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과정은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 사이의 활발한 충돌과 공개적인 이익 다툼을 요구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건전한 민주주의 과정은 타협 불가능한 도덕적 가치들과 근본주의적인 세력들 사이의 대결로 매우 쉽게 바뀔 것이다.

- ① 합의와 법치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건전한 정치적 갈등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 ②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정치의 장에 있어 개인 혹은 집단 간 투쟁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③ 합의, 만장일치, 법치가 갈등의 역동성을 가로막으므로 건전한 민주주의는 이를 피해야 한다.
- ④ 인종적, 민족주의적, 종교적 성격의 정치투쟁은 그 상대편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 ⑤ ‘정치적인 것’이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세력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정치적으로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한다.

◆ 09 LEET(예비) 언어이해 26~28번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국가 권력에서 정통성이 없는 권위주의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선거 경쟁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여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중시하는 주창자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경쟁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 및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경쟁 및 참여가 보장되는 기본적인 절차로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제도로는 투표권, 공무 담임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대표와 정부가 구성되고 국민을 대변하는 절차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균열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및 자원 배분상의 불합리로 권력 남용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여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참여와 선택에서 연유하는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 기구가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실현된 성과와 실적이 국민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응답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통제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대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퇴출되는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기 지속적인 체제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일컬어진다. 현대 사회는 시민 사회, 정치 사회, 국가 그리고 경제 사회 등 부분 체제들의 복합체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각 부분 체제의 제도화 과정이고, 각 부분 체제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우선, 이익 표출 및 집약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 사회의 결사체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조직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 및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익 갈등을 조정했을 때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해진다. 사회 구성원 개인과 집단의 이해가 개별적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결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민 사회 내의 요구 사항이 취합되어 갈등 조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정당, 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정치 사회가 사회적·경제적 균열로 인한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 규칙 및 절차를 갖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 정치 사회의 공식 및 비공식 행위자들이 경제사회적 균열구조에 조응하여 편제되고, 이들의 이익을 정치 영역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할 때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되는 것이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통해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국가 능력, 그리고 경제적 지배 세력의 압력이나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자율성 역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중요한 관건이다. 국가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국가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이해를 통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갈등 확산을 방지하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경제 사회가 자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경제의 비윤리성을 치유하는 복지 제도를 통해 시장 실패자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경제 사회 내의 합의를 중심으로 제도화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

26. 위 글의 ‘대표성’, ‘응답성’,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② 선거를 통한 정치 권력의 탄생은 정치적 응답성을 보장한다.
- ③ 정치적 대표성은 정치적 응답성보다 책임성 보장에 기여한다.
- ④ 정치적 응답성은 정치 기구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의미한다.
- ⑤ 정치적 책임성은 대의제에서 정치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 행위와 관련된다.

27.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축과 조정 기제를 강화한다.
- ② 경제사회적 균열 구조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화를 억제한다.
- ③ 시민 사회의 활성화로 분산된 이익의 집약 통로를 확보한다.
- ④ 경제와 사회 지도층의 이익 독점을 통제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 ⑤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사회적 합의 장치를 확충한다.

28. ㉠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수 노조 허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 ② 피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대부분은 재력가였다.
- ③ 보통·평등 선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투표 성향은 강화되었다.
- ④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 ⑤ 법정 선거 연령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변화하지 않았다.

◆ 18 경찰대 1차 38~40번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㉔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치적 접근법의 특징을 드러낸다. 참여 그 자체를 위해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본질과 방식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이다. 흔히 현대 민주주의가 대중적 유명 인사 정치, 사운드 바이트** 식 논쟁, 사적 이익과 야망의 추구 등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해, 그 주창자들은 계몽된 논쟁, 이성의 공적 사용, 진리의 불편부당한 추구 등을 지지한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정제되고 사려 깊은 선호이다. ㉕오페

와 프로이스는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나 판단은 세 가지 기준, 즉 ‘사실을 중시’하고 ‘미래를 중시’하고 ‘타인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적 판단에 결함이 있다면, 대개 이런 기준 중 어느 하나에서, 가령 무지하거나 근시안적이거나 이기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민주주의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여러 정치적인 선호를, 확고하게 형성된 것 또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의사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어야 하는가. 만일 후자라면 정치적 의사는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논점은 사려 깊은 선호에 대한 관심이 엘리트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작동에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올 것인가와 관련된다. 달리 말해, 민주적인 공공선 개념은 개인들이 지닌 선호의 취합물일 뿐인가, 아니면 진지한 공적 논쟁이나 숙의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오페와 프로이스는 ‘참여가 증가하는 만큼 합리성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정치 참여의 범주를 확대하는 문제나 민주주의 확산의 영역들을 재고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이론의 과제가 아니다. 현재 과제는 ‘숙고를 거친, 사회적으로 입증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선호가 형성되도록 장려하는 ㉖제도나 절차의 도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현대 정치의 문제점은 숙의 민주주의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㉗피시킨은 대규모 유권자 속에서 발견되는 공적 생활에 대한 무관심, 정당 및 통치 집단의 엘리트주의 등을 비판하였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능한 대중과 정치적으로 불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한 엘리트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배제된 집단의 선거권 확보같이 더 큰 평등을 향한 역사적 추세는 대규모의 불참 및 무관심을 동반하였다. 투표권이 확대되었어도 투표율은 하락해 왔고 민주적 토론은 대개 피상적이며 그 결론은 지식·정보의 부족하에 경솔하게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은 소외, 이탈, 자기만족 등을 겪으면서 정치 과정에서의 단절감을 드러낸다. 정책보다 정치인에 대한 강조가 미디어에 쫓은 선거판을 지배하고 사운드 바이트가 논쟁을 대신하며 유명인사의 인기가 신념에 입각한 정치 주장을 대체한다고 한다.

피시킨은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광범위한 정치 논쟁 과정이나 문제들로부터 점점 분리된다고 한다. 정책의 원칙을 탐구하거나 정책 방향을 숙의하기보다는 기존 견해나 이해관계에 정책을 맞추려는 여론조사나 표적 집단 면접 등과 같은 마케팅 기법이 정책 과정을 엄습한다. 엘리트들은 유권자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통해 정치를 운영한다.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발견되는 이성, 논쟁, 불편부당성에 근거한 공적 영역의 이상은 엘리트와 정당이 여론조사에 의존하면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숙의 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숙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나 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일군의 견해’로 정의된다. 숙의 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 정통성이 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공적 결정에 대해 옹호 가능한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들의 목표는 숙의 과정을 통해 사적인 선호를 공적인 조사나 검증에 건널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㉘코헨은, 민주적 결사체란 ‘결사를 맺는 계약 조건의 정당화가 공적인 논쟁과 논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속

에서 시민들은 ‘자유로운 공적 숙의의 틀을 자신들이 제정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숙의는 어떤 우월적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공개적으로 정당화할 준비 없이 단순히 선호만을 표명할 수 없다. 이런 이상이 실현되려면 권력, 부, 교육 등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왜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 동기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치 모델은 시민들이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평등을 누릴 것을 요구한다.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숙의를 통해 정치적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치,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숙의(熟議): 깊이 생각하여 의논을 거듭함.

**사운드 바이트: 정치인의 연설 중에서 뉴스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짧은 한마디 문장이나 구절.

- ④ 육아 설비 실태를 재검토하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 ⑤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참조하고 참가자들 간의 토의 후에 나온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 조사를 한다.

38. ㉠~㉣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 정치적 판단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장래의 일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함이 있는 것이다.
- ② ㉡: 참여가 많을수록 합리성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숙고를 거쳐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선호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 ③ ㉢: 오늘날 유권자들은 정치 과정에서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만족을 추구한다.
- ④ ㉣: 현대 정치는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고 논쟁다운 논쟁 없이 정책보다 정치인의 인기도가 정치적 주장을 대체하고 있다.
- ⑤ ㉤: 정책 수립에는 어떤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가 요구된다.

39. ㉤를 지지하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독특한 사회 관습이나 규칙, 관습적인 인간관계의 방식 등에 따라서 논쟁과 논증의 관행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 ② 공적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인간사에서 제거될 수 없으며 이기적인 정치 행위자가 숙의를 통해 이타적 인간으로 바뀔 수 없다.
- ③ 어떤 사실을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지는 이전의 개념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호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
- ④ 불편부당함의 기준을 두고 토론하면서 좀 더 나은 결론을 추구하게 되면, 토론의 상대방이 가진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⑤ 다수파의 견해란 어느 특정 선거 시점에서 논의의 균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 주는 지표일 따름이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날을 잡아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학교나 공회당에 모여 후보 선택에 대해 논의를 한다.
- ② 시민들에게 공적 논증과 정치적 선택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③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검증된 혁신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한다.

◆ 13 LEET 언어이해 10~12번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회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 기관이다. 미국 하원을 예로 들어 의회의 입법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발의된 의안은 본회의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때 의장은 의안 회부를 거부할 수 있는 문지기 권한을 지닌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수정안 제출을 포함한 심사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과반 표결로 의결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장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안은 규칙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규칙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수정불가 규칙 또는 무제한 수정을 허용하는 수정허용 규칙을 부여한다. 단, 규칙이 부여되지 않으면 의안은 사장된다.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수정불가 규칙이 부여된 경우는 가부 표결만 하며, 수정허용 규칙이 부여된 경우는 수정안이 제출되면 심사 활동을 거쳐 일반적으로 최종 수정안부터 제출된 순서의 역순으로 가부 표결을 하게 된다. 표결은 대개 과반 표결로 한다.

입법 과정은 의원들의 정치적 대표 체계의 다중성 때문에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지역구민의 대표이고,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소속 정당 지지자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의 각 단계에서 교차 압력으로 작용하여 입법 과정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같은 역동성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익분배 이론은 의원들의 지역구 대표성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하는 상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데, 이로써 각 상임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지역구 의원들이 모이게 되어 강한 정책적 동질성을 가진다. 그러나 정작 상임위원회들 사이는 이해관계가 다르게 되므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익분배 이론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한 기제로 의원들 간의 지지의 교환을 든다. 가령, 지역구 이해의 강한 수요자로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갑과 을 의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본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처지인 갑 의원은 을 의원에게 지원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는 상임위원회 간에 혜택의 상호 교환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결국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간 혜택 교환의 약속이 투표 거래로 실현되는 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의회 다수나 다수당의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된다.

둘째, 정보확산 이론은 의회 다수의 정책 선호를 강조한다. 의회는 지역구 수요를 위한 이익의 할당 차원을 넘어 국민 전체를 위한 본회의 중심의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정보확산 이론은 상임위원회가 입법 과정의 주요한 원칙인 다수주의에 의거하여 의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배정 단계에서부터 본회의 주도로 각 정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당 간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리하여 각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대리인이 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생산한다. 발의된 의안이 입법화되어 집행된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불확실한데, 상임위원회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축적된 전문적 정보를 본회의의 심사 과정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정당이익 이론은 의원이 정당 지지자를 대표하게 하는 정당의 역할을 중시한다. 입법 활동에 따른 정책 결과는 정당의 미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당은 의정 활동 결과를 최대화해 자신의 입법 성과로 지지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대표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동일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하여금 다가올 선거에서 운명을 공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공동 이익의 추구는 정당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유인이 되며, 이는 다수당에 더욱 중요하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입법 과정 초기에 일어나는 반면, 본회의에서는 소수당의 수정안 제출 등 반대 활동이 활발하게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당 지도부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부터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 즉 당내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하며 정당의 핵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여기서 정당 지도부는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거나 본회의에서 소수당에 동조하는 다수당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안정자 기능을 하며, 결국 상임위원회를 다수당의 대리인으로 만드나.

이처럼 상호 경쟁하는 세 가지 이론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생애 해 내는 정책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고 있다.

1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본회의의 의결 과정에서 이익분배 이론은 정당 간의 투표 거래를 강조하나 정보확산 이론은 의회 다수의 정책 선호를 강조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 기능에서 이익분배 이론은 이해관계의 수요자 측면을 강조하나 정보확산 이론은 정책 정보의 공급자 측면을 강조한다.
- ③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에 있어 이익분배 이론은 의원들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나 정보확산 이론은 정당 간 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④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에서 이익분배 이론은 지역구 대표성을 강조하나 정당이익 이론은 정당 지지자 대표성을 강조한다.
- ⑤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정보확산 이론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강조하나 정당이익 이론은 정당의 입법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11. ‘규칙위원회’의 규칙 부여와 관련한 <보기>의 추론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이익분배 이론의 관점에서, 수정허용 규칙은 수정불가 규칙에 비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간 투표 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역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 수 있다.
- ㄴ. 정보확산 이론의 관점에서, 수정허용 규칙은 수정불가 규칙에 비해 본회의에서 지역구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 수 있다.
- ㄷ. 정당이익 이론의 관점에서, 수정불가 규칙은 수정허용 규칙에 비해 상임위원회를 다수당의 대리인으로 만들어 본회의에서 다수당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보기>와 같은 경우를 가정할 때, 위 글의 [A]에 따라 정리한 <그림>의 각 단계에서 결정될 정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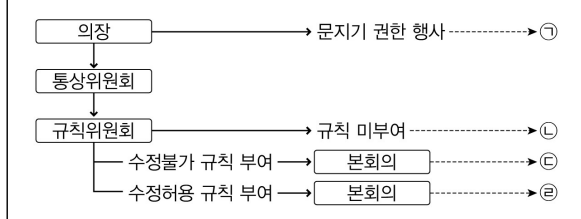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 의회에서 의원 갑이 ‘정책1’을 발의했다. 현재는 ‘정책2’가 시행되고 있으며 본회의 의장은 ‘정책2’를 선호한다. 의원들은 기권 없이 자신의 정책 선호와 가장 가까운 의안에 투표한다.

<표> 정책 선호에 따른 통상위원회와 본회의의 구성

			통상위원회	본회의
부역 규제	강화	정책1	13명	50명
	유지	정책2	6명	70명
	완화	정책3	6명	125명
합계			25명	245명

<그 림>

입법 과정의 흐름도



- ㉠ ㉡ ㉢ ㉣
- ① 정책1 정책1 정책1 정책3
② 정책1 정책1 정책2 정책1
③ 정책2 정책1 정책1 정책2
④ 정책2 정책2 정책2 정책3
⑤ 정책2 정책2 정책3 정책2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나 투표에 대한 연구를 정치학의 분야로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선거나 투표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공정하면서도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 무엇인지를 수학적 논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A] 현행 ㉠다수결 제도는 두 명의 후보만을 놓고 선거를 하는 경우엔 완벽하게 민의를 반영하는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하지만 후보의 숫자가 셋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라는 세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왔다고 하자. 갑은 국민의 34%에게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66%의 국민들은 갑을 싫어한다. 하지만 세 후보를 놓고 다수결로 투표를 해보면 갑, 을, 병이 각각 34%, 33%, 33%를 획득하여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갑이 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아도 한 측은 단일 후보가 나온 반면 다른 측은 두 후보가 나와서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다. 그럼 세 명 이상의 후보를 놓고 투표할 때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을까?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비교투표 제도가 있다.

[B] 조합비교투표 제도는 각 투표자가 단 한 명의 이름만 투표지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 중에서 자신이 누구를 선호하며, 을과 병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고, 갑과 병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적는다. 이렇게 후보들을 둘씩 붙여서 누가 이기는지 비교하여 1 대 1 대결에서 가장 많이 이긴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이다. 실제 투표 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각 후보의 이름 옆에 자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등수를 적어 넣으면 컴퓨터가 금방 둘씩 짝을 지어서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점수투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각 유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3점을 주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2점, 세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1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얻은 각 후보의 점수를 합한 후 가장 높은 점수의 합을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이는 현행 다수결 제도보다는 뛰어난 투표 방식이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결선투표 제도는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1, 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 러시아 등의 선거에서 사용되는데, 현행 다수결 제도보다는 우수한 면이 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투표 방법보다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투표가 두 번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용도 많이 든다.

39. 위 글의 글쓴이가 제기한 핵심적인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투표의 다양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② 결선투표 제도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 ③ 다수결 제도는 과연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 ④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선거에서 수학적 논리를 사용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40. <보기>의 상황에 [A]와 [B]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각각 당선된 사람은?

<보 기>

민수네 반 학생 40명이 반장 선거를 하였다. 학급 학생 모두에게 투표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세 명의 반장 후보 순이, 철수, 영희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적게 하였다. 투표 용지를 모아 개표하니 아래와 같았다.

투표 용지	투표 용지	투표 용지
1위 순이	1위 철수	1위 영희
2위 철수	2위 영희	2위 철수
3위 영희	3위 순이	3위 순이
총 17표	총 13표	총 10표

- ① 순이, 철수 ② 순이, 영희 ③ 영희, 철수
- ④ 영희, 순이 ⑤ 철수, 영희

41.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 ㄱ. 후보가 셋 이상일 경우, ㉠에 비해 ㉤가 더 합리적이다.
 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가 ㉤보다 합리적이다.
 ㄷ. ㉠가 ㉤보다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
 ㄹ. 후보자가 두 명일 경우, ㉠가 가장 이상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2. <보기>는 ㉠의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자동사인 '당선되다'에 '-시키다'가 결합됨으로써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가 되며, 사동의 의미를 더한다.

- ① 교육하다 - 교육시키다 ② 반영되다 - 반영시키다
- ③ 결혼하다 - 결혼시키다 ④ 축소되다 - 축소시키다
- ⑤ 굴복하다 - 굴복시키다

- 출전: 한순구 기고. '다수결에 대한 이의'.
 《동아일보》 2007.11.29.
 - 정답: 39.③ 40.① 41.② 42.①

◆ 22년 7월 고3 14~17번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다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서는 집단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을 '경제 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다. 경제 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므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지막 가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채화와 용역의 공급자로,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중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 있다.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은 단일 사안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 선호일 경우,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내

거는 공약은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때 중위투표자란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 전체의 분포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한 유권자를 말한다. 이 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가지며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 결국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중위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모형으로는 합리적 무지 모형이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무지 모형으로 설명한다.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는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집단에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공공선택론자인 뷰캐넌은 사회의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헌법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헌법정치경제학을 제시했다. 뷰캐넌은 헌법정치경제학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헌법 제정 이후 의사결정이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일상적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는 '헌법적 정치'이다.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 활동이고, 일상적 정치는 헌법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정치 활동이다. 그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헌법 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달리 ㉠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겐 편익을 준다고 보고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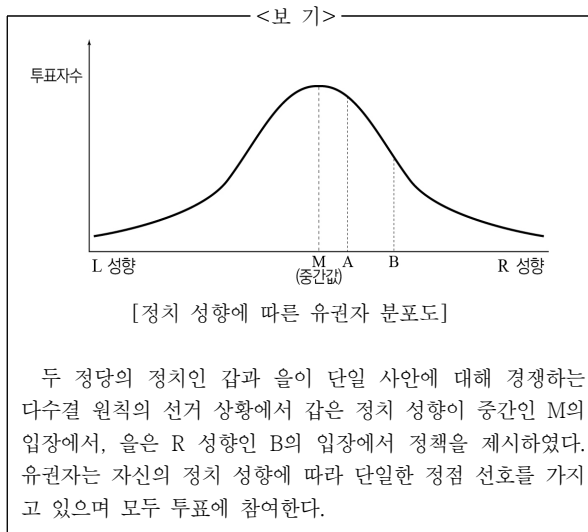
14.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공공선택론이 기존의 정치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② 공공선택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단위를 무엇으로 보는가?
-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경제시장과 정치시장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 ④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떤 이론으로 분석하는가?
- ⑤ 공공선택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효용은 정치인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
- ② 정치시장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 ③ 의사결정의 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④ 정치인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보다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
- ⑤ 유권자는 정치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비용이 이에 대한 이익보다 크면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

16. [A]를 적용하여 <보기>의 상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치 성향이 M의 왼쪽에 있는 L 성향의 유권자들은 모두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②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갑이 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③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R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④ 정치 성향이 B의 오른쪽에 있는 R 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⑤ 을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을 수정한다면 을은 갑이 제시한 정책과 유사한 정치 성향을 띤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17. 뷰케넨이 ㉠처럼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활동을 규정하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 ②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헌법적 정치를 통해 입법적 수준에서 헌법의 규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헌법적 정치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규칙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 ④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일상적 정치를 하는 과정보다 헌법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쉽기 때문에
- ⑤ 일상적 정치보다 헌법적 정치를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의 대안에 합의하는 것이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안전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 선택 이론은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Borda) 투표제 등이 있다.

㉠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전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다.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는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 안전 채택 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정부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 줄 테니 투표를 통해 선택하라고 제안하였고, 이때 세 사람의 선호 순위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투표에 부치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병원, 학교, 경찰서 중 두 대안을 선정하여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남은 한 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결정된다. 즉,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 <표>의 투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투표자 \ 선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갑	병원	학교	경찰서
을	학교	경찰서	병원
병	경찰서	병원	학교

<표>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전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전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이때의 총비용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의사 결정 비용은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외부 비용은 어떤 안전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전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경우에는 0이 된다. 안전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 결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의사 결정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 감소하므로 외부 비용 곡선은 우하향하며, 두 곡선을 합한 총비용 곡선은 U자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최적 다수결제에서의 안전 통과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이 제도는 의사 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최적 다수결의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 점수 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로, 합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다.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된다.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되며,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여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략적 행위란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 행위는 어떤 투표 제도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나, 점수 투표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보르다 투표제는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 (n-1), ..., 1점을 주고,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으로, 점수 투표제와 달리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점수 투표제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 후생: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수준.

38.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투표제에서는 투표자의 전략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 ②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에 0점을 부여한다.
- ③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채택된 대안으로 인해 사회의 후생이 감소되기도 한다.
- ④ 점수 투표제는 최적 다수결제와 달리 대안에 대한 선호 강도를 표시할 수 있다.
- ⑤ 최적 다수결제는 단순 과반수제와 달리 안전 통과 기준이 안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9. ㉡와 관련하여 <표>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결 승자가 최종의 대안으로 결정된다.
- ②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갑’과 ‘을’이 ‘학교’에 투표하여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된다.
- ③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하는지,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하는지에 따라 투표의 결과가 달라진다.
- ④ ‘병원’, ‘학교’, ‘경찰서’를 동시에 투표에 부치면, 모두 한 표씩 얻어 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 ⑤ 대안에 대한 ‘갑’, ‘을’, ‘병’ 세 사람의 선호 순위는 바뀌지 않아도, 투표의 결과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40. ㉞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어진 점수를 투표자가 임의대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투표자는 중도의 대안에 관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점수 투표제와 달리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을 유발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일부에게만 선호도가 높은 대안이 다수에게 선호도가 매우 낮으면 점수 합산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 ⑤ 순서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할 경우, 모든 투표자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이라도 최종 승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42. 대안 I ~ III에 대한 투표자 A ~ E의 선호 강도가 <보기>와 같다고 할 때, ㉠ ~ ㉣을 통해 채택될 대안으로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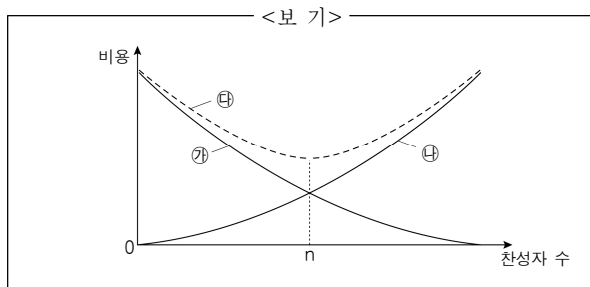
<보 기>

투표자 대안	A	B	C	D	E
I	3	1	1	3	1
II	1	7	6	2	5
III	6	2	3	5	4

(단, 표 안의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선호함을 나타내며, 투표에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과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	㉡	㉢
①	I	III	II
②	II	II	II
③	II	II	III
④	III	I	III
⑤	III	II	II

41. <보기>가 [A]의 각 비용들에 대한 그래프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외부 비용으로, 반대하는 투표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 값이 커진다.
- ② ㉢는 의사 결정 비용으로, 투표 참가자들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
- ③ ㉢는 총비용으로, ㉡와 ㉢를 합한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 n이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 ④ 투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의 값은 0이 된다.
- ⑤ 안전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 ㉢는 이동하지 않지만 ㉡는 이동하지 않는다.

◆ 12 LEET 언어이해 9~11번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심리학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대별된다. 먼저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은 유권자 대부분이 일관된 이념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그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곧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혈연, 지연 등에 따른 사회 집단에 대해 지니게 되는 심리적 일체감처럼 유권자들도 특정 정당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따지기보다 정당 일체감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유권자를 정당이 제시한 이념이 자신의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그 효용을 계산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공간 이론은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으로 나뉜다.

초기의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은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이념 공간을 일차원 공간인 선으로 표시하고, 보수적 유권자 X, 진보 정당 A, 보수 정당 B의 이념적 위치를 그 선에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근접 이론은 X와 A, B 간의 이념 거리를 각각 $|X-A|$ 와 $|X-B|$ 로 계산한 다음, 만약 X와 A의 이념 거리가 X와 B의 경우보다 더 가깝다면 X는 A에 더 큰 효용을 느끼고 투표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유권자 분포의 중간 지점인 중위 유권자의 위치가 양당의 선거 경쟁에서 득표 최대화 지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X가 이념 거리가 더 가깝다는 것만으로 자신과 이념이 다른 A를 지지할까? 이에 대해 방향 이론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이념 원점을 상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이념과 같은 방향이되 이념 원점에서 더 먼 쪽에 위치할수록 그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이 증가하며, 반대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이념과 다른 방향일 경우에는 효용이 감소한다고 본다. 가령 이념 원점이 5라고 한다면, X의 A와 B에 대한 효용은 각각 $-|5-X||5-A|$ 와 $|5-X||5-B|$ 로 계산되는데, 이때 X는 이념 거리로는 비록 A가 가깝다 할지라도 B에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방향 이론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은 그 정당이 유권자와 같은 이념 방향의 극단에 있을 때 최대화된다는 것이다.

두 이론은 이념에 기초한 효용 계산을 통해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의 ‘어리석은 유권자’ 가설을 비판했지만 한계도 있었다. 근접 이론은 미국의 정당들이 실제 중위 유권자의 지점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방향 이론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념적 극단에 있는 정당이 실제로 수권한 경우가 드물다는 비판에 각각 직면했다. 이에 근접 이론은 정당이 정당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정당 일체자)들로부터 멀어질 경우 지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중위로부터 다소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고 이론적 틀을 보완했다. 또 방향 이론은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념 범위인 관용 경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당이 관용 경계 밖에 위치하면 오히려 유권자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이론에 반영했다.

이러한 후기 공간 이론의 발전은 이념적 중위나 극단을 득표 최대화 지점으로 보았던 초기 공간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정당 일체감이나 그 밖의 심리학적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공간 이론은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비판적으로 전망했던 ‘세련된 유권자’ 가설을 무리 없이 입증해 왔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이념에 기초해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

한편 공간 이론의 두 이론은 유권자의 효용 계산과 정당의 득표 최대화 예측에서 이론적 경쟁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설명력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의회 선거를 예로 들면, 근접 이론은 미국처럼 ㉠ 양당제 아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선거를 더 잘 설명해 왔다. 반면에 방향 이론은 유럽 국가들처럼 ㉡ 다당제 아래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선거를 더 잘 설명해 왔다. 한 연구는 영국처럼 ㉢ 다당제 아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여당에 대해 기대하는 효용은 근접 이론이 더 잘 설명하고, 유권자가 야당에 대해 기대하는 효용은 방향 이론이 더 잘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 환경에 따라 정당들의 득표 최대화 전략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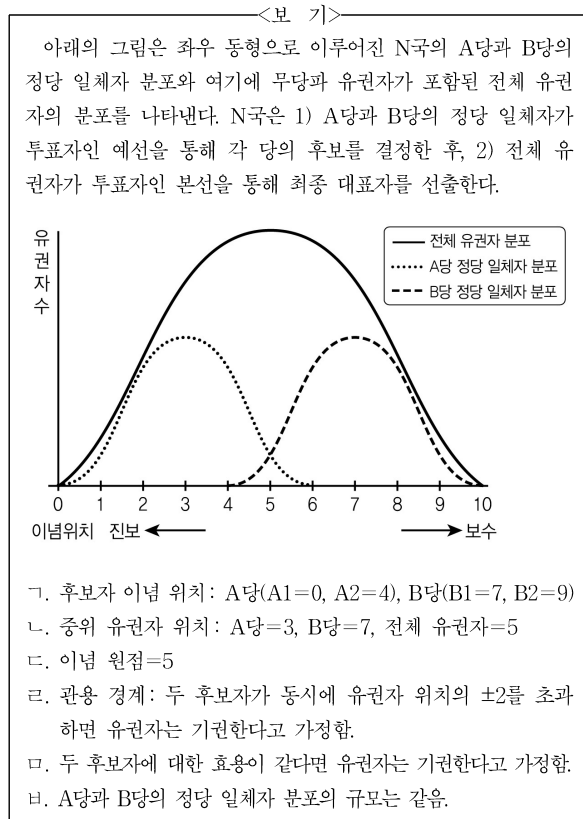
9. 위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이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 ㉡ 공간 이론은 유권자와 정당 간의 이념 거리를 통해 효용을 계산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설명하였다.
- ㉢ 후기 공간 이론의 등장으로 득표 최대화에 대한 초기의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 간의 이견이 해소되었다.
- ㉣ 후기 공간 이론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념의 비중이 커졌다.
- ㉤ 후기 공간 이론은 정당 일체감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세련된 유권자 가설을 입증했다.

10. ㉠~㉤에서 득표 최대화를 위한 정당의 선거 전략을 공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 초기 근접 이론은 ㉠에서 지지를 하락을 경험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 후기 근접 이론은 ㉡에서 정당 일체자의 이탈을 우려한 야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하지 못함을 설명할 수 있다.
- ㉢ 후기 방향 이론은 ㉢에서 정당 일체자의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 초기 근접 이론은 ㉣에서 중도적 유권자의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 후기 방향 이론은 ㉤에서 중도적 유권자의 관용 경계를 의식한 야당이 이념적 극단 위치로 이동하지 못함을 설명할 수 있다.

11. <보기>의 선거 상황을 가정하여 위 글의 이론들을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근접 이론은 B1이 예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② 초기 근접 이론은 A2가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③ 초기 방향 이론은 본선에서 승자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④ 후기 근접 이론은 A2가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⑤ 후기 방향 이론은 A1이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